



##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복지이슈 FOCUS



발행일 : 2023. 02. 08  
발행인 : 대표이사 원미정  
발행처 : 경기복지재단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31-267-9309 F. 031-898-5935 E. hykim@ggwf.or.kr

## 경기도 새로운 패러다임, ‘기회복지’

### 목차

- I. 기회복지란?
- II. 추진 전략 P·E·S
- III. 정책 제언

### 3대 기회목표와 복지를 연계한 ‘기회복지’

- ▶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모든 도민의 사회참여와 잠재력 실현의 기회를 보장하여 적정 수준의 삶의 누리는 ‘기회복지’ 추진
  - 더 많은 복지 : **복지영역**을 확대하여 생활복지 실현
  - 더 고른 복지 : **복지대상**을 확대하여 신(新)복지사각지대 해소
  - 더 나은 복지 : **복지수준**을 **적정수준까지** 높여 삶의 질 제고

### 적극적(P)이고 기술 적용(E)의 지속가능한(S) 복지 추진

- ▶ 문제에 ‘적극적(Proactive)’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복지 추진
  - 찾아가 “똑똑”노크하고, 이야기하고(Talk), 기술과 연계하는 똑똑한 복지
  - 이웃을 활용한 상시적 발굴, 신중년일자리로 연결하여 사업 지속성 확보, ‘똑부’ 알림톡 개설,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태양광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제공
- ▶ 복지서비스에 ‘기술(Electron)’을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
  -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 생활영역에 ICT기술을 접목 시켜 생활의 편의를 돕는 복지서비스 혁신
  - 복지혁신(복지기술센터 설치)의 기회, 경제발전(고령친화산업 지원)의 기회, 인력 부족의 대안(AI기기 보급 확대)으로 활용
- ▶ 재정 효율성을 고려, 환경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복지
  - 즉각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할 때 재정적 여력과 환경적 측면 등 미래 세대의 수요까지 고려한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지향
  - 친환경-삶의 질 제고-경제혁신 선순환 복지(사회복지영역에 ESG 적용), 생활복지서비스 중심 복지(돌봄거래스), 균형발전복지(사회보장특구) 추진

### 우선 추진 사업

-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기회복지 반영 ▶ 경기도형 사회보장특구 시범사업(안) 마련 및 실행 ▶ 기회복지 100인 원탁회의 추진



9 772713 985004  
ISSN 2713-9859



연구책임 |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지영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위원

도민의  
사회참여와  
잠재력 실현의  
기회 보장을 위한  
‘기회복지’ 추진

##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3대 정책 목표와 5대 기회 패키지 추진

- ▶ 기회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를 의미하며(다음 어학사전), 역량(자질 또는 능력)을 얻는 기회가 평등할 때 정의는 실현<sup>1)</sup>
  - 경기연구원(2022)의 조사<sup>2)</sup>에 따르면, 도민의 90%는 ‘기회’ 중심 도정에 대해 지지(찬성)하고 있고, 찬성 이유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51.8%)
  - 사회경제적 성취를 위한 ‘자원’을 갖는 기회가 평등할 때 경쟁은 공정하며, 정부 역할은 불평등의 원천인 교육이나 금융 등에 대한 접근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
- ▶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2023년 1조 470억 원 중점 투자

〈그림 1〉 5대 기회패키지 예산



자료 : 경기도 보도자료(2022. 12. 18). 2023년 예산 분야별 특징 및 핵심 사업

- ▶ 저성장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은 적절
  - 기회 불평등과 경제성장은 음(-)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sup>3)</sup>를 근거로 역량(기회) 향상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지’

## 도민의 사회참여와 잠재력 실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복지’ 추진

-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안전망 약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위험을 회피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복지’가 중요
  - 기회 5대 패키지 중 복지영역에 해당하는 기회안전망의 사업 대부분은 돌봄과 관련되어 있고 사후적 서비스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선제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복지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복지가 지향하는 결과의 평등을 기반으로, 도민의 삶 전반의 영역을 포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프레임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1) 센(Amartya Sen)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역량의 평등(equality of capability)’이 중요하다고 강조함(김범수(2022).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아카넷 참고)

2) 김을식·김유나(2022). 『기회 보장 정책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주민의 인식과 시사점』, 경기연구원 정책브리프

3) 황수경 외(2017).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Ferreira, F. H. & V. Peragine(2015). “Equality of opportunity: Theory and Evidence”, Discussion Paper No. 8994,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Bonn; 김을식 외(2022) 재인용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복지와 연계하여  
패러다임 전환

- ▶ 기회복지란 일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모든 도민의 사회참여와 잠재력 실현의 기회를 보장하여 적정 수준의 삶을 누리는 복지
  -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와 연계하여 8기 복지정책 방향 및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활용
- (1) 더 많은 복지는 기존의 사회서비스분야를 넘어 교통, ICT기술, 음식, 법률 등 일상 생활 유지에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하여 생활복지 실현
  - 사회보장기본법의 5개 영역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7개 영역의<sup>4)</sup> 분야까지 포괄
- (2) 더 고른 복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빠짐없이 골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新)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장기간의 코로나 쇼크와 대내외 경제위축,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가계경제의 타격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경제적 한계치에 달한 중산층을 신(新)복지사각지대로 포괄
- (3) 더 나은 복지는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적정 수준 제공하여 모든 도민이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복지 실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최저 수준의 복지를 도민의 중간 수준(기준 중위소득 100%)으로 올려 적정한 삶을 유지
- ▶ 기회복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문제에 적극적(Proactive)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에 기술(Electronic)을 적용하여 혁신의 계기로 활용하며, 재정 효율성과 환경친화적 접근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복지 전략을 추진

## II. 추진 전략 P.E.S

### 문제에 ‘적극적(Proactive)’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복지

- ▶ (의미) 복지 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지원을 연계하여 기준에서 제외된 사람을 지원
  - 수원세모녀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 수원시에 신청할 수도, 수원시가 찾기도 어려웠던 거주 불일치의 대표적 사례
  -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발굴주의를 병행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비율은 4%대에 불과하는 등 인력 부족, 엄격한 자격 기준의 문제 노정
    - 경기도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2021)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공과금·교육비 등 미납, 병원진료 못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규모가 19.4%로 2020년의 2.5%에 비해 7.8배 증가

4) 사회보장기본법의 5개 영역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환경이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7개 영역은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임

가까운 이웃을  
복지발굴단 일자리로  
운영하여 사업의  
상시성과 지속성 담보  
발굴 정보는  
“똑부”를 통해 신고

### ▶ (방향) 찾아가고(knock), 이야기하고(talk), 기술과 연계한 “똑똑”한 복지체계 구축

#### (1) 찾아가서 “똑똑” 노크하기

- 가까운 이웃(오래 거주해서 주민을 잘 아는 토박이, 동네 자발적 모임의 리더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발굴의 상시성 담보**
  - 위기가구 대부분 은둔형으로 발굴을 위해서는 이웃(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복지 급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 경기도 긴급복지하이라인 신고자(1,203명) 중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제보가 14.4% (173명)이고, 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다음뉴스, 2023. 1. 30)
- 이들의 방문을 일자리사업과 연계(중장년기회소득, 고용부 신중년일자리 사업)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
- 다만, 대내외 경제위축과 고금리로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新)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은 온라인 메신저 채널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차별화**
  - 최근의 위기가구는 이른바 중산층<sup>5)</sup> 이상으로 통상적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일시적 어려움으로 일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온라인 메신저 채널이나 AI를 활용하여 복지제도 수용 여부 확인 : 세금납부 등의 이력을 활용하여 개인전화번호를 최대한 확보

#### (2) 주민의 어려움과 이야기(‘Talk’)하고 필요한 자원 연계

- 전문적인 상담의 방식보다는 주민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여 신뢰와 유대감 형성에 초점을 두어 고립된 생활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초점 전환
- 발굴에 참여한 지역 이웃은 주민과 편안한 소통(이야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과정 이수

#### (3) 신고도, 급여제공도,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똑똑하게(smart)

- (정부)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 예정
- (경기도) **알림톡 “똑부”를 개설**, 상시 발견 신고,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적시에 충분하게 제공
  - 경기도민에게 ‘똑부’ 가입 안내 카카오톡 문자 발송(카카오톡 실행하기 → 채널(O) 검색창에 경기도 알림톡 ‘똑부’ → 채널 추가하기)
  - 챗봇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의뢰하면 즉시 대응하고, 복지정보를 수시로 제공
  - 신고 및 상담내용은 추후 심층 분석하여 경기도 위기가구 특성 도출 및 지원방안 마련

자료(우) : 국민비서 구뵈의 카카오톡 구동 모습을 저자 휴대폰 캡처한 것임



5)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소득에 초점을 두고 정의

## II. 추진 전략 P·E·S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더 나은 복지 실현

- ▶ (적용사례 1)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sup>6)</sup>의 별도 신청 없어도 공무원이 확인해서 수급 통장으로 입금하는 적극(proactive) 행정 추진 및 대상자 확대하여 “더 고른 복지” 실현
  -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 취약계층(수급 노인과 장애인)과 시설(노숙인 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1~2월에 한하여 각각 20만 원과 40만 원을 현금으로 대상자 계좌로 입금하는 자체 사업 실시)
  - (추가 사업)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보장수급 신청 시 가족구성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이 확인해서 에너지공단에 일괄 신청하는 적극 행정 추진, 더 나아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를 모든 수급가구로 확대하고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7:3으로 매칭하여 “더 고른 복지” 실현
- ▶ (적용사례 2)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연료)를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여 ‘더 나은 복지’ 실현
  - 취약계층 중심의 그린리모델링(단열, 방한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인 신(新)복지사각지대까지 확대하고,
  - 경기도 복지시설(이용시설)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교체하고 관리(경기에너지협동조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 농촌이나 공동체가 형성된 도시지역은 에너지마을기업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소(상업용)를 설치·판매하여 에너지기회소득 확보

### 복지서비스에 ‘기술(Electron)’을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 선도

일상 생활 영역에 ICT 기술을 접목한 ‘복지기술’로 서비스 혁신

- ▶ (의미) 고령화, 코로나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 생활 영역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생활의 편의를 돕는 복지서비스의 혁신
  -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이 가능한 ICT 기반 돌봄이 노인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복지서비스에 디지털 방식 추가
  - 독거 어르신들의 정서와 생명,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 \* 시스피커 ‘누구(NUGU)’를 활용한 인공지능돌봄서비스의 성과 평가



자료 : <http://robotnews.tistory.com/877>

- 6)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고 추위에 민감한 가구(노안·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와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를 선별해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거동이 어려워 지원대상의 12.7%가 지원받고 있지 못한 상황(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3. 1. 28. 제출한 자료)
- 7) 정부는 기초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최대 59만2천 원 할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는 가스요금을 30만4천 원, 차상위계층은 44만8천 원 추가 할인 계획이며 문자·우편·전화로 신청 독려 예정

## II. 추진 전략 P·E·S

복지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융합적 접근을 위해  
“복지기술센터” 설치

- ▶ (현황) 복지에 적용되는 기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기술 수준은 타 분야에 비해 높지 않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확산이 제한적
  - 응급상황을 지원하거나 말벗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양방향 및 사투리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하지 않는 사례 빈번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긴급상황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속하게 119에 연결되는 서비스
    - 스마트 돌봄로봇 : 식사, 말벗 등 일상생활관리, 약 복용, 체조 등 건강관리,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생활지원사에 알림
    - 스마트헬스 모니터링 ‘골든 서클’ : 웨어러블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혁신 시스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인바디 등 헬스 모니터링
  - 기기 작동이 미숙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 문제, 기기 사용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어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기사용 결과로 축적된 정보를 기기 개발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미비
- ▶ (방향)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수요를 기술과 접목하여 경제발전과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복지혁신 도모

### (1) 복지혁신의 기회로 활용

-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복지기술의 적합성은 낮아지게 되므로 복지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성과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시키는 노력
  -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은 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을 사회의 니즈와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재조합·재설계
-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수요와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융합적 복지기술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추동할 **복지기술센터**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sup>8)</sup>에 설치
  - 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복지환경의 변화는 기존 복지문제와 다른 양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후세대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 초래 우려
  - 복잡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이 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기술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중요

〈그림 5〉 과학기술과 복지의 관계성



자료 : 최영훈(2011). “과학기술과 사회복지 어떤 관계가 있나?”. 『광운학술페스티벌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와의 만남』 자료집

8)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국가로부터 연구비 지원받아 다양한 분야 연구 진행 중이며, 보건 관련 연구는 의료-IT 융합기술 연구실, 의료용 임플란트 융합연구실, 디지털휴먼연구센터(모션캡처와 생체정보와 로봇동작 기술 개발 등으로 복지 연계 시 시너지 기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복지요구를 확대하고,  
복지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심리치유서비스 제공

### (2)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

-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①4차 산업혁명 기반한 생활밀착형 돌봄 기반 조성 ②보건소 대상 AI, IoT기반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돌봄 확산 ③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 R&D를 강화 ④노인복지관·요양 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하는 등 돌봄기술 개발 지원이 포함<sup>9)</sup>
- 노인인구가 늘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 (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생활 기술'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
  - 스마트홈, 고령친화식품, 디지털 헬스케어, 운동·재활서비스, 소셜로봇, 노인성질환 측정기기 등 고령친화산업은 향후 시장규모가 지속 증가할 전망('20 72조 원 → '30 168조 원) (경희대학교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mahanaim0702/222891838947>)

### (3) 인력부족의 대안으로 활용

- 출생아 감소('22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역대 최저치 /통계청 22년 9월 인구 동향) 및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돌봄인력 특히, 농촌의 인력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돌봄로봇을 도입해 어르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인력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

#### ▶ (적용 사례 1) 고령친화 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 적용 복지 요구 품목을 확대,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더 많은 복지' 실현

-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보험 적용을 받는 복지요구는 총 18개 품목<sup>10)</sup>에 불과하여, 일상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고 환자 돌봄과 보호자 부담을 낮추는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 추가
- 노인성 질환자의 영양섭취를 돕는 음식까지 보험대상으로 확대, **실버푸드(고령친화 식품)**를 지원 품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맞춰 복지관의 도시락 배달 시 연하식, 연화식, 일반식 등 맞춤형 제공(일본처럼 고령친화식품 구입 시 국가가 일부 지원)

#### ▶ (적용 사례 2) 메타버스 기술 또는 기존의 VR기술을 활용하여 심리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복지인력 양성

- 단절된 생활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VR힐링 스페이스 심리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힐링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 VR로 펼쳐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안마의자, 발 마사지도 함께 제공하여 심신의 긴장 완화(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추진 중)
- VR기기를 다룰 수 있는 중장년 혹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VR기기 활용 기술을 교육하고,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 ▶ (그 외) 디지털격차 완화를 위한 노인, 장애인 대상 키오스크 교육 실시, 시기기 보급 등

9) 전세계 돌봄로봇의 시장 규모는 '21년 46조 원에서 '26년 129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고, 삼성은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어르신의 운동을 돕는 노인돌봄 특화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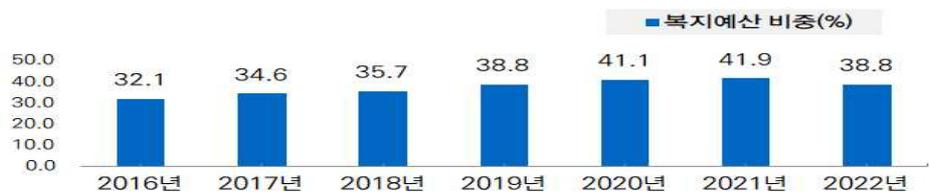
10)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요양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 18개 품목 (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

늘어난 복지 예산을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입하고,  
ESG관점을  
복지서비스에 적용할 때  
지속가능성 담보

###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고, 환경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복지

- ▶ (의미) 즉각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할 때 재정적 여력과 환경적 측면 등 미래 세대의 수요까지 고려한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지향
- ▶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사회·환경 등 세 측면으로 구분
  - ① 경제적 측면은 빈곤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시 녹색 기술의 촉진,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유지
  - ② 사회적 측면은 음식, 물,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성평등과 같이 성취를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 보장
  - ③ 환경적 측면은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미래 세대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동일한 천연자원에 접근 보장
- 지속가능성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
- ▶ (현황)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상 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복지지출에 대한 고민 확산
  -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도 예산 중 복지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늘어난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이 경제적·사회적 생산성을 높여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로 작용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 가능

〈그림 6〉 경기도 예산 중 복지 예산 비중



자료 : 경기도(2022). 『2022년도 경기도 예산개요』

- ▶ (현황 2) 코로나 19로 사회복지시설 폐쇄 등 서비스 중단을 경험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가치로 “ESG” 경영 실천을 선언한 사례 증가
  -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은 환경적인 요인 이에 교육, 주거와 같은 권리 요인이 더해진 다차원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서 ESG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인식 확산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등 세 곳에서 ESG 경영 실천을 2022년 5월 선언하였으나 목표나 계획, 모니터링, 담당 조직 및 인력 등이 미비한 상황
  - 경기도의 ESG 지원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빠져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법행정적 지원 필요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일자리와 연계하여  
환경-경제-복지의  
선순환 체계 구축

▶ (방향) 일상 생활과 관련한 서비스로 복지의 중심을 전환하여 경제-사회-환경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31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여 사회보장의 격차 최소화 지향

### (1) 친환경-삶의 질 제고-경제혁신 선순환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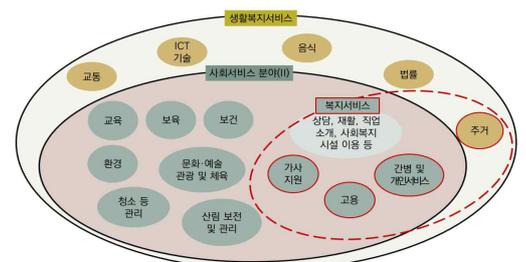
- 복지사업은 인적 투자로 고용과 연계,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의 사다리'로 작용하여 삶의 질 제고-복지재원 지출 효율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삶의 질 제고의 방향은 친환경으로 설정하여 환경-복지-경제혁신의 선순환 방식 추진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노인일자리와 연계<sup>11)</sup>하는 등 복지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 발굴하여 경제 혁신 도모

### (2) 생활복지 '서비스' 중심 복지

- 서비스(현물)는 현금과 함께 복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 상 '사회서비스'라고 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정의<sup>12)</sup>
- 국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①집단적 생산(규모의 경제)을 통해 소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예. 탄소저감) 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조직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③서비스 영역을 4차산업혁명과 연결된 분야(예. 보건 의료 등)로 확대하여 일자리를 확충하면 사회의 선순환구조,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 취약계층 '복지' 중심의 서비스를 모든 도민의 '생활' 중심 서비스로 확장하여 개별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복지의 지속가능성 담보

- 생활복지서비스는 도민의 일상 즉,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외에 이동, 정보통신, 식품, 법률서비스까지 전 분야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 다만, 생활은 거주지역의 수요나 서비스제공 양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7〉 생활복지서비스의 범위



자료 : 김희연·김영수(2021). 『생활복지서비스 확장 가능성 탐색』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포커스

### (3) 균형발전 복지

-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 경기도는 산업시설의 남부 집중, 군사보호 및 환경 규제에 의한 지역 간 격차가 복지분야에 그대로 적용되어 빈곤 수준이나 복지시설서비스 설치 등에 차이 발생
- 사회보장격차는 재정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만 재정여건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자원 발굴과 도의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이 중요

11) 의정부 흥선노인복지관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쌀뜨물을 하수구에 버려 수질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던 동네떡집과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고민하던 복지관이 만나 쌀뜨물을 사용한 EM(Effective Microorganism)발효액을 노인일자리로 생산한 사례가 있음

1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II. 추진 전략 P·E·S

돌봄거래소와  
사회보장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적용사례 1)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간 유대 약화 등으로 노인과 아동돌봄에 대한 복지 수요를 주민 간 자발적 거래를 통해 해결하는 ‘돌봄 거래소’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 약간의 회비 납부
- 돌봄 비용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는 중간운영기관에 개인 마일리지로 적립
- 중간운영기관은 회원 유치, 수혜자와 제공자 연계, 마일리지 적립 및 거래 관리
-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이돌봄뿐만 아니라 사소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서비스(싱크대 고쳐주기, 대청소, 생일날 함께 해주기, 영화관 같이 가주기 등)
- 경기도와 시군은 돌봄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산재 보험 가입
- 사람 중심의 가치 회복과 신뢰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관계적 복지”를 실현

〈노인돌봄공동체 사례 : 영국 Southwark Circle〉

배경 : 1940년대에 만들어진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탄의 반성에서 씨클 모델 발전

운영방식 : ① 우선 자기 지역의 씨클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저렴한 월회비를 납부 ② 필요한 서비스가 생기면 씨클에 연락하여 요청, 도우미(회원, 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기관 등)가 와서 문제를 해결 ③ 서비스비용은 토큰으로 납부 ④ 회원은 유급도우미(일자리)로 활동 가능

자료 : 김희연·유영성·고재경(2014),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 (적용 사례 2) 31개 시군의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만의 사회보장특구 신규사업을 추진

- 사회보장특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 및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근거
-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전국 8개 시군을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성격의 사회보장특구사업을 진행하여 있어 균형발전 목표 달성 의문
- 경기도 특성(예. 시군간 수급비율 차이가 10배 차이)을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보장 영역 중 소득수준, 즉 빈곤수준이 낮은 곳을 취약지역으로 선정, 특별지원하는 방식
-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상대빈곤율(16.7%)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30% 이상인 읍면동 지역을 빈곤취약지역으로 선정(그림의 붉은점)하여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빈곤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근본적 접근을 하여 복지부 사업과 차별화



자료 : 김희연·김영수(2021), 『사회보장특구 쟁점과 시사점』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포커스

▶ ( 그 외) 생활복지서비스 추진, 사회복지영역에 ESG 적용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기회복지 실행력  
담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제고

#### 복지에 기회를 연계한 기회복지 정책 프레임

▶ P·E·S 전략 추진으로 도출된 사업과 기회 5대 패키지를 매칭, 기존의 복지 사업에 더해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프레임 구축



#### 기회복지의 실행력 담보와 도민 의견 수렴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 (제언 1) 기회복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법정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실행력 담보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기회복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보장하는 사회보장 영역을 일상 생활과 관련한 전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상응하여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확대 개편(예. 교통, ICT 기술, 법률 등)하고 관련 조례 개정
-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의제에 복지기술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복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타 영역과 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 (제언 2) 기회복지의 지향과 정책 프레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 추진 전략에서 제시한 15개 사업의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약이나 현안 해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
- “기회복지 100인 원탁회의” 추진하여 도민의 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 추가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 ▶ 우선 추진 사업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기회복지 시그니처 사업 반영
- 경기도형 사회보장특구 시범사업(안) 설계 및 하반기 실행
- “기회복지 100인 원탁회의” 추진하여 기회복지 홍보 및 도민 의견 수렴